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백경원 042-331-0092, 010-6406-7949)

제 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및 구청장 면담 추진

날 짜 2005년 10월 11일

## 보 도 자 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직도 구성 안 된 구청 있어...

구청장 면담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서 전달

#### ▶ 면담일정 ◀

- ☐ 대덕구청 : 10월 12일 오후 4시(구청장실)
- ☐ 서구청 : 10월 13일 오후 3시(구청장실)
- ☐ 유성구청 : 10월 20일 오후 3시(구청장실)
- ☐ 중구·동구 미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는 대덕구청을 시작으로 하여 10월 12일부터 5개 구청장 면담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들은 구청장 면담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민간단체 의견서를 제출하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 ▶민간주도·공공지원의 형태를 담보하기 위한 민간영역의 참여보장, ▶실질적인 예산확보와 계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 공동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구성과 운영의 중요성을 피력한바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7월 31일부터 각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는 등의 “민·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공동준비위원회는 지난 9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8월 이후

회의를 개최 한 곳은 대덕구와 유성구가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그 외의 구는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표협의체가 이제야 구성되고 있는 실정에서 실무협의체 구성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5개 구 중 대덕구가 가장 먼저 대표협의체 구성하였으며 유일하게 민·관 공동의장제를 추진하고 있어 민간영역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또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민간간사가 1인 이상 채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개구 모두 이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공무원만의 간사제도를 시행할 경우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이 늦어지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볼을 보듯 뻔한 일이며 올 해만 해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2회 이상 변경된 지역구도 있었다.

5.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지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의견서를 5개구에 제출하고 구청장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업추진과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민간영역의 참여보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참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현황(2005년 9월 15일 현황)>

구 분	동 구	중 구	대덕구	서 구	유성구
회의개최 (8월이후 기준)	없음	없음	1회, 9월 7일	없음	1회, 8월 9일
대표협의체 구성	단 체 장 위 축, 미구성	단 체 장 위 축, 10월 7일 예정	단체장 위축	미구성	공개모집
실무협의체 구성	미구성	미구성	미구성	미구성	미구성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유급간사계획	없음	미정	미정	조례에 설치 근거 있음	없음
내년예산계획 (단위: 천원)	38,000천원	37,920천원	38,840천원	39,520천원	40,000천원
지역복지 욕구조사	10월부터 추진 예정	10월 용역예정	11월 용역예정	-	2006년 1월 용 역예정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http://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견서

## ○ 제안취지

지난 2004년 7월에 확정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 분권화 움직임, 그리고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사회복지 사무소의 시범 사업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도입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정부 내 보건복지정책의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관할 지역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지역의 5개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조례 내에 민간참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부족하며, 협의체 구성과 추진 과정에서도 지방정부는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준비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관의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상호책임성과 견제,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견인해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 ○ 제안내용

###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을 바랍니다.

대전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올 4월로 '올바른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민토론회'였습니다. 그러나 각 구에서 준비단 회의는 중구 5월, 서구와 대덕구는 7월, 유성구는 8월에 이뤄졌습니다. 예외적으로 동구는 시범 사업을 했던 지역으로, 3월부터 논의에 들어갔으나 담당자가 바뀐 후 3월 18일 이후에 8월 달까지 회의가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법적 시행일인 7월 31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체는 물론 대표협의체조차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사회복지육구조사 및 계획과 관련한 향후 일정은 전혀 추진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①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속한 위원 구성 및 창립을 바랍니다.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해 진행될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 2. 민간주도·공공지원의 형태를 담보하기 위한 민간영역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 학계를 포함하는 관련 주체들의 폭 넓은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범사업의 경우, 민간영역 위원의 참여 접근성과 의결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에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영역의 참여 보장은 단지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과정에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였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공청회나 간담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 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세 차례 정도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민간영역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민간영역은 지역사회복지협

의체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는 한 차례도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이 없었으며 8월 달에 조사한 결과 그 이후에도 토론회나 공청회의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민·관 공동의장제로 하여야 합니다.
- ② 올 해 안에 최소한 한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를 통해 올바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3. 실질적인 예산확보로 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존의 각종 위원회들이 실제적인 기능을 하지 못 하고 형식화로 전락하는 원인으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적극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회의에 모여 덕담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시범사업 평가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회의 개최, 기본 기능 수행, 사무 등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운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기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들과 다를 바 없는 형식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①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② 예산 계획에 1인 이상의 상근 유급민간간사 인건비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사업 진행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집행될 예산은 대표협의체 독립회계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 1)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논의의 장으로써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구성과 운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의 구성과정을 볼 때 기존의 위원회처럼 형식적이고 행정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진행이 우려됩니다.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운영을 공개하고 참여가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원구성의 과정이나 명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고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지역주민이 각 위원의 발언, 회의내용, 추진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① 공개지원절차를 통해 위원을 위촉하며 위원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주민 및 수요자 대표'를 삼입해야 합니다.
- ② 회의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7일 전 각 위원에게 미리 공지하고 회의안건과 내용은 5일전 위원들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 ③ 회의록상 위원의 '발언내용'을 기재하고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 ④ 연 1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야 합니다.

##### 2) 위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조례에 관련조항이 없거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협의체 운영 시 다양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상의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그들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협의체 운영조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 연임 횟수를 적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장기연임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권한에 따라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인해 형식적인 활동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회의참석은 활동의 성실함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므로 해촉사유에 '장기간 불출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절차상의 명확성을 위해 '재적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인한 의결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경우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① 위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야 합니다.
- ② 위원의 해촉 사유에 '장기간불출석'을 삽입하며, 해촉 사유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 ③ 위원의 해촉시 재적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해야 합니다.
- ④ 대표협의체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는 월 1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 ⑤ 위원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3) 실질적인 운영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예산 속에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표현되어 있고, 예산을 통해 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의 예산 확보의 정도가 자치단체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과 더불어 실질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인의 상근 유급민간간사가 필요합니다. 정책이 예산을 통해 실현된다하더라도 그 실현 과정에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① 1인 이상의 상근 유급민간간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②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은 대표협의체 독립회계로 집행되어야 합니다.